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과정

재미있는 회계와 세무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21년 6월 9일

I. 회계란 무엇인가?

■ 루카 파치올리와 회계



오늘의 경제소사

루카 파치올리(Luca Pacioli)는 회계학의 아버지다. 1494년 11월 10일 그가 지은 산술기하비율 및 비례 총람은 유럽전역에 복식부기를 확산시키며 주식회사 출범과 근대적 자본의 축적을 이끌었다.

괴테가 인간의 창조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극찬한 총람의 성격은 수학 백과사전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처음 받아들인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수학법칙을 집대성한 책이다. 사금을 찾아내 금괴로 꾸민 셈이다. 파치올리는 방대한 지식을 어떻게

게 모았을까? 스승과 여행 덕이다. 1445년 이탈리아 중부 산 세폴크로에서 태어난 그는 수학의 원리를 이용해 원근법을 개척한 화가 프란체스카 밑에서 수학의 세계에 빠졌다. 20세에 부자상인의 수학 가정교사로 들어갔을 때 상업부기도 배우고 상선을 타고 여행하며 지중해에 접한 아라비아 지역에서 선진 수학을 익혔다.

서른살 무렵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파도바 나폴리대학에서 강의하던 그는 일곱 살 연하인 다빈치와도 사귀었다. 다빈치의 그림과 건축에 스며있는 원근법과 기하학의 스승이 파치올리다. 그의 초상화도 다빈치 작품이다. 잊혀진 천재라고 하지만 파치올리는 행복한 편이다. 총람이 자본주의의 산파로 불릴만큼 서구의 발전을 낳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 2006.11.10. 권홍우 칼럼 중-

I. 회계란 무엇인가?

■ 한국은행 재무상태표(일부 재분류)

<u>재무상태표</u>		(단위: 조원)	
한국은행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자본	
		<u>부채</u>	
국채	₩14.5	화폐발행	₩97.4
외화증권	357.6	통화안정증권발행	168.4
예치금	26.3	당좌예금	45.1
어음대출	17.3	외화예수금	61.8
정부대출금	1.3	기타의 부채	94.2
투자자산	19.1	부채 총계	₩466.9
기타의 자산	44.2	<u>자본</u>	
		잉여금	₩13.4
		자본 총계	₩13.4
자산 총계	₩480.3	부채 및 자본 총계	₩480.3

II. 해운·조선 회계사례

1. 위기의 조선업, 버릴 것은 버려라
2. 반도체 초호황은 대박일까 저주일까
3. 돈 빼낸 한진해운, 돈 퍼부는 대우조선

1. 위기의 조선업, 버릴 것은 버려라

*한국경제 다산칼럼 2015년 8월 28일자
「위기의 조선업, 버릴 것은 버려라」*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의 공공기관 인사는 의외성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인사도 그렇다. 과거 정부가 퇴임 경제관료 지정석처럼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특정 대학 출신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경제관료 출신은 위기 수습 능력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두 은행 모두 조선업 부실로 심각한 위기라는 점에서 경제학자로 수장을 교체한 것은 의외다. 대수술이 필요한 외상환자 주치의의 외과에서 내과로 바꾼 모양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던 조선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냉각됐다. 2010년에는 성동조선이, 2013년에는 STX조선이 은행 관리로 넘어갔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도 적자다. 올 2분기에 대형 3사가 기록한 영업손실은 4조8000억원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얼마 못 가 시가총액이 모두 날아간다.

1. 위기의 조선업, 버릴 것은 버려라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 지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표방한다. 그러나 조선업 호황 시절에 선수금환급보증(RG) 수수료의 달콤함에 빠져 보증을 남발했다가 덤터기를 썼다. 지금은 대출금 중 조선업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그냥 조선(造船)은행이다. 자본총액이 10조원 미만인데 성동조선에 물린 돈만 2조6000억원이다. 삼성중공업에 위탁경영을 애걸하지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제대로 신경 쓰지 걱정이다.

더 큰 화근은 대우조선이다. 삼성중공업이 생존을 위해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까지 기획하고, 현대중공업이 3조원 넘는 영업손실 공표와 함께 수뇌부 전원을 교체했던 2014년에도 대우조선은 독야청청 건전성을 뽐내는 재무제표를 내놨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부실을 자백했고 감사인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신규 선박 수주에 필수조건인 RG 받기도 어려워져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가 30%씩 책임지고 민간은행이 나머지 10%를 기존 보증비율로 안분하는 구제보증 상황이다. 발주처가 좋아할 리 없고 제값 받기는 틀렸다. 대우조선에 대한 수출입은행 대출금은 12조4000억원으로 자본총액보다 많다. 지분 31.5%를 보유한 최대주주 산업은행의 대출금은 4조1000억원, 농협은 1조6000억원이고 민간은행은 모두 1조원 미만이다.

1. 위기의 조선업, 버릴 것은 버려라

조선업 위기는 중국의 급속한 시설 확장에서 초래됐다. 중국 동부연안지역 성(省)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조선업에 뛰어들었다. 2008년에 20%였던 선박 건조능력 점유율이 2013년에는 40%까지 급증했다. 국제경제 동반 침체로 물동량은 줄었는데 건조능력은 급증해 선박 수주가격을 끌어내렸다. 대형 3사 모두 해양플랜트로 활로를 찾으려다 낭패를 당했다. 공사비 추계 당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돼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대규모 손실이 났다. 셰일가스 개발이 앞당겨져 유가가 폭락함으로써 후속 공사도 기대난망이다.

조선소 시설 투자비는 전형적인 매몰원가(sunk cost)다. 이미 지출했고 회수가 불가능해 아깝지만 잊어야 한다. 시설이 바닷가에 있어 재활용도 어렵고 원상복구 비용도 비싸다. 깊은 바다에 빠진 고가 선박처럼 영어 원문 그대로 침몰된 원가다.

1. 위기의 조선업, 버릴 것은 버려라

성동조선·STX조선·대우조선 대출채권 대부분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몫이다.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70%,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15%씩 출자했으며 산업은행은 전액 정부 출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끌려 다니면 국가재정은 거덜난다. 수익성 없는 도크를 따로 붙들고 위탁경영자를 찾느라 허비할 겨를이 없다. 문제되는 조선소를 같이 놓고 잉여시설과 인원에 대한 생산성을 평가해 살릴 부분과 폐기할 부분을 가려내야 한다. RG와 일반채권 간의 손실 부담 문제는 복잡하다. RG가 대부분인 수출입은행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았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휘체계를 통합하고 구조조정 경험과 성과가 풍부한 인사를 찾아 긴급수술을 맡겨야 한다.

2. 반도체 초호황은 대박일까 저주일까

매일경제 2017년 10월 12일자
「반도체 초호황은 대박일까 저주일까」

반도체 산업의 높은 변동성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 삼성전자가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달러 값은 대폭 떨어졌고 김영삼정부는 세계화 기치를 내걸고 해외여행 자유화와 주식·채권 시장 개방을 앞당겼다. 대구의 섬유, 부산의 신발 등 전통적 수출 품목이 저환율 날벼락에 쓰러진 직후 반도체 가격도 공급과잉으로 폭락했다.

1996년부터는 수출 수량도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출대금은 급감했다. 때맞춰 발생한 한보·기아 사태로 은행 부실화 우려가 고조되자 해외자본이 자금을 거둬가면서 외환 보유액은 바닥났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목을 매는 처지가 됐다. 김대중정부의 빅딜 해프닝 여파로 1999년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하면서 하이닉스가 출범했다. 초기부터 자금난에 허덕이던 하이닉스는 2002년부터 3년간 D램시장 호황이 재현됨에 따라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듯했으나 2006년 이후 반도체가 침체로 반전되자 다시 부실화됐다. 2008년에는 달러 값이 폭등했고 선박 건조 관련 외화 선수금에 대한 환헤지용 선물환 매도 계약을 대거 체결한 조선사는 막대한 손해를 떠안았다. 결산서에서는 환율 상승 이익과 선물거래 손실이 상계된 것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손해였다. 선물환 비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STX는 부도가 났고 통화옵션상품(KIKO)에 가입한 중소 수출업체의 피해도 엄청났다. 원매자 없이 떠돌던 하이닉스는 2012년 최태원 회장의 결단으로 SK에 인수됐다.

2. 반도체 초호황은 대박일까 저주일까

2016년부터 반도체 호황이 재현됐는데 이번에는 슈퍼 사이클이다.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이 극심한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대박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수익회계 변경으로 반도체 대박 풍선은 더욱 부풀려지게 됐다. IFRS15에서는 건설공사나 선박건조 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에서 대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진행률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완성품을 인도해야 수익인식이 가능하다. 판매했더라도 무상서비스 기간이 종료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품질보증비용의 중요성에 따라 수익인식을 미뤄야 한다. 장기공사와 신제품 등의 수익인식 시점이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는 반도체 같은 성숙단계 제품 수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기업의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무역 강대국 중 유일하게 기축통화에 끼지 못하는 한국에서 변동성이 높은 반도체는 환율 그라운드의 악동(惡童)이다. 벌어들인 달러를 모두 국내에 반입하면 달러 값이 폭락해 다른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은 추락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불공정 무역과 환율조작 혐의를 뒤집어쓴다. 하이닉스의 올해 반도체 수익은 28조~29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바쁜 걸음으로 국내외 투자를 지휘한다. 올해 중국 투자는 벌써 3조원을 넘어섰고 일본 도시바 지분의 인수도 마무리 단계다. 반도체 수익 전망치가 72조~78조원에 이르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재판을 받는 형국이라 리더십이 적막강산(寂寞江山)이고 자사주 매입소각이 소일거리다.

2. 반도체 초호황은 대박일까 저주일까

반도체 경기와 다른 사이클의 먹거리를 찾아 과감한 장기투자를 결단해야 한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창출하는 데이터와 프로세스 용량 증가로 인한 전력소요 급증 상황에 맞춘 신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투자도 좋은 대안이다. 상법상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 이사가 장기적 투자를 결단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재선임을 겨냥해 주주들이 선호하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매달릴 유인이 크다. 혁신 성장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주된 수익원이 쇠퇴하면 '노키아의 비극'을 막을 수 없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권한과 민형사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지배구조 합리화와 스투어드십코드 실천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전제로 경영 능력을 갖춘 대주주 경영인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미래이익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혁신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촉진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3. 돈 빼낸 한진해운, 돈 퍼부는 대우조선

*한국경제 다산칼럼 2016년 10월 4일자
「돈 빼낸 한진해운, 돈 퍼부는 대우조선」*

한진해운 졸속 회생절차의 뒤탈이 심각하다. 압류 위험과 입항·하역 거부로 바다 위를 떠도는 선박에 탑승한 선원 1000여명은 탈진 상태다. 운송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과 빈 컨테이너 수거도 걱정거리다. 세계 각국에 깔려 있는 한진해운 영업망 가치도 급속히 소멸되고 있다. 영업망을 선박 등 유형 자산보다 먼저 매각해 한 푼이라도 더 건져야 한다.

주가를 떨어뜨릴 부정적 조치는 주식시장 마감 뒤 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평일인 8월30일 오전에 열린 채권단 긴급회의는 생똥맞다. 회의 목적을 채권단 자금 지원으로 잘못 짚은 일부 투자자의 매집으로 오전 한때 주가는 18.7%나 급등했다. 낮 12시쯤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이 알려지자 급락으로 반전했고 전일 대비 24.2% 하락한 시점에 거래가 정지됐다. 세 시간 사이에 고점과 저점 차이가 43%에 이르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투전판이었다.

3. 돈 빼낸 한진해운, 돈 퍼부는 대우조선

한진해운·대우조선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활동/연도별	2014년		2015년	
	한진해운	대우조선	한진해운	대우조선
영업활동	134.5	△523.4	170.2	△606.3
투자활동	514.7	△224.3	447	△165.4
재무활동	△682.6	539.6	△813.5	1,832.0
연말 현금잔액	386.5	17.6	184.6	1,072.2
영업활동에 포함된 이자유출	310.5	170.7	278.5	206.6

주) 활동별 금액은 순유입이며, △는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은 순유출을 의미함.

법정관리 조짐은 한진해운 현금흐름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요구불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의 유입과 유출을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기본재무제표로서, 분식회계로 손익이 조작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영업활동에서 유입된 현금을 투자활동에 투입해 유출하는 것이 정상적 흐름이다. 한진해운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서 모두 현금이 유입됐고 이는 빚을 갚는 재무활동에 유출됐다. 투자활동에서의 현금 유입은 자산 매각을 뜻한다. 영업에서 번 돈과 자산 매각대금을 채권단이 모두 회수해 현금잔액은 해마다 감소했다. 회사 존립보다는 채권 회수가 우선이었다.

3. 돈 빼낸 한진해운, 돈 퍼부는 대우조선

대우조선은 완전 반대다. 영업활동에서 대규모 현금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지출은 계속됐다. 부족한 현금은 재무활동에서 모두 조달됐다. 2015년에는 재무활동 순유입액이 1조8320억원으로 확대됐고 현금잔액도 1조72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자를 지급하고도 영업활동에서 돈을 벌어들인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까지 요구하며 채권을 회수했다. 그러나 이자를 제외한 영업활동 자체만으로도 현금적자인 대우조선에는 투자용을 보태 현금 공급을 늘렸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관리기준은 천양지차(天壤之差)였다.

김대중 정부가 획일적으로 몰아붙인 부채비율 200% 규제 때문에 해운업은 보유 선박을 매각해 빚을 갚고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했다. 고율의 용선료 약정이 해운업 부실의 주범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해운업 세금부담을 낮추려고 도입한 톤세도 화근으로 돌변했다. 톤세는 실제소득이 아닌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기준의 추정 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운업 불황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방식에서는 납세할 세금이 없지만 톤세의 세금은 계속된다. 법인세 방식에서는 결손금 중 일부를 미래의 과세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지만 톤세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다.

3. 돈 빼낸 한진해운, 돈 퍼부는 대우조선

해운업은 경기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간 위험에 따른 수익 배분 모델이 달라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자는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채권 회수에 나설 유인이 있다.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면 확정금리를 초과하는 수익은 주주가 독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해야 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속히 마무리하고 현대상선 민영화를 앞당겨 민간 주도로 해운업을 되살려야 한다.

III. 조세체계의 개요

1. 우리나라 조세체계

국세	소득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	종합부동산세
	유통	인지세, 증권거래세
	*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hr/>		
지방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특별시·광역시의 배분방식은 달리 적용되며, 자치구에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일부 주민세 등이 배분됨		

III. 조세체계의 개요

2. 과세대상자에 의한 구분

	자연인	법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최고 42%) ▪ 양도소득세 (주식은 대부분 20%) ▪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최고 25%)
증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최고 50%)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최고 50%) 	
과세범위 및 원칙	원천설, 열거주의 원칙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원칙

IV. 우리나라 세제의 현실

1. 기업투자 포기 대가인 초과세수의 비극
2. 기업 투자는 줄고 가계·국가 빚은 늘고
3. 대한민국 재무상태 '의견 거절' 위험 없나

1. 기업투자 포기 대가인 초과세수의 비극

*한국경제 다산칼럼 2019년 3월 5일자
「기업투자 포기 대가인 초과세수의 비극」*

지난해 4분기 하위층 소득이 대폭 줄고 상위층 소득은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가 충격적이다. 최하위 20%의 가구별 명목소득은 17.7% 줄어든 반면 최상위 20%는 10.4% 증가했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였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한 반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출자규제 강화로 기업인을 압박했는데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인 2017년 2~3분기가 경기 정점이었다는 통계청장의 언급은 사후적 분석이지만 섬뜩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밀려오는 먹구름을 무지개로 오인하고 불황을 막을 우산까지 미리 치우는 오류를 범했다는 추론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초호황이 이번에도 오판의 빌미가 됐다. 두 회사가 끌어올린 평균치 때문에 기업은 이익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는 양심불량 세력으로 몰렸고, 출자규제 강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여야가 합세했다. 법인세 인상은 미래 기대수익의 가치를 깎아내려 투자를 포기시킨다. 최종 이익 1%가 투자안의 채택과 포기를 가르는 변수인데 이익 3%를 더 빼앗는 세율 인상은 투자를 포기시키는 고문 도구다.

1. 기업투자 포기 대가인 초과세수의 비극

삼성전자 현금흐름표

(단위: 조원)

활동구분	과거 2년		최근 2년	
	2013	2014	2017	2018
영업활동	46.7	37.0	62.2	67.0
투자활동	-44.7	-32.8	-49.4	-52.2
재무활동	-4.1	-3.1	-12.6	-15.0
기초현금	18.8	16.3	32.1	30.5
기말현금	16.3	16.8	30.5	30.3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이익과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 회계 구조다. 제품 수명주기는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이어진다. 도입기에는 시험연구 및 개발비 소요가 많고 마케팅비용 부담도 커 손실이 생기지만 성장기 이후에는 비용과 이익이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이익이 늘어도 새로운 제품 개발 투자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제품 전체의 이익과 법인세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투자가 포기되면 이익과 법인세는 오히려 증가한다.

1. 기업투자 포기 대가인 초과세수의 비극

문재인 정부 들어 출자규제 강화와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영향으로 투자 위축은 심각했지만 법인세 세수는 오히려 늘었다. 2018년 법인세는 전년보다 12조원 늘었는데 이는 당초 세수예산보다 8조원 초과된 금액이다. 일부에서는 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오해하지만 2017년 말의 세율 인상은 2018년 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인상분 징수는 2019년부터 이뤄진다.

투자가 줄고 재무활동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례는 삼성전자 현금흐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흐름은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되는데 2013~2014년(과거)과 2017~2018년(최근)의 추이는 확연히 구별된다. 영업에서 얻은 현금의 투자사용 비중은 과거에는 93%였으나 최근에는 79%로 줄었다. 반면 영업현금 중에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된 재무활동 현금 비중은 9%에서 21%로 대폭 늘었다.

1. 기업투자 포기 대가인 초과세수의 비극

경제 성장기에는 기업이 영업현금에다 증자와 신규 차입으로 조달한 재무현금을 추가해 투자에 투입했다. 신규 투자 소요가 적은 담배산업의 KT&G는 투자에 일부만 사용하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에 환원하는 비정상 구조를 유지한다. 반도체와 휴대폰 등 첨예한 국제경쟁에 직면한 삼성전자는 신제품 개발 투자에 생사가 걸렸는데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학적 출자규제 때문에 축소 지향의 비정상적 현금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출자규제에 대비해 자사주 매입과 현금 보유를 늘리다 보면 일자리 창출 능력은 바닥으로 추락한다.

투자 포기 대가인 초과세수를 강의실 소등과 폐기물 수거 등 변태적 임시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신제품 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보강되지 않으면 수출기반은 무너지고 기업은 더 쪼그라든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야 안정적 세수가 전제조건인 포용국가도 가능하다. 경제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운용의 기본 틀을 바꿔 한국 경제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

2. 기업 투자는 줄고 가계·국가 빚은 늘고

*한국경제 다산칼럼 2019년 1월 14일자
「기업 투자는 줄고 가계·국가 빚은 늘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강국’은 1962년부터 네 차례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였다. 철강·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공장이 전국 곳곳에 들어섰다. 은행 예금 대부분이 기업에 대출됐고, 대규모 전대차관으로 조달된 외화도 공급됐다. 개인 자금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돈줄에 얽힌 정경유착과 비자금 폐해도 컸지만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눈부셨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반도체 특수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달러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대구 섬유와 부산 신발 등 일부 수출 기업이 원화로 환전한 수입금액이 줄면서 도산했다. 1996년부터 반도체 가격은 급락했고, 무역적자와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 회수가 겹치면서 외환보유액은 바닥났고, 1997년 말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수혜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위기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과도한 기업부채를 위기 주범으로 지목했고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당시 30대 그룹 평균이 518%였음을 감안하면 초강력 규제였다.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자 이미 도산한 한보와 기아에 이어 쌍용 대우 동아건설 등 대기업이 줄줄이 쓰러졌다. 1995년 말의 30대 그룹 중 15개가 쓰러지는 반타작이었다.

2. 기업 투자는 줄고 가계·국가 빚은 늘고

민간은행이 회수한 자금은 가계대출로 풀려 나갔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 인수로 대처했다. 자금이 풍부해진 카드사는 카드 발급 경쟁에 나섰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늘렸다. 카드 빚이 강력범죄의 핑곗거리로 대두되자 정부는 대금추심 규제를 강화했고, 연체대금이 급증하자 은행이 카드채 차환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LG카드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3년 채권단 손으로 넘어갔다. 은행계 카드사는 계열 은행과 합병했고, 삼성카드가 계열 금융회사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기업대출 규제로 발생한 잉여자금이 카드채를 매개로 가계빚으로 전환된 것이 카드사태의 본질이다. 기업 투자 위축과 가계대출 급증이 맞물린 작금의 상황과 흡사하다.

국민경제 3대 주체 중 가계는 소득 일부를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정부는 균형재정을 맞추고 남는 돈을 기업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균형재정은 어렵고 국채 등 확정채무뿐만 아니라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실한 총당부채도 늘어난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2013년 말 짝을 맞춰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필자는 2014년 1월15일자 다산칼럼에서 '공포의 쌍천조(雙千兆)'가 급속히 증폭될 위험을 경고했다. 2018년 9월 말에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다시 짝을 맞춰 1500조원을 돌파했다. 5년도 안 돼 50%가 넘는 폭증은 국가적 재앙이다.

2. 기업 투자는 줄고 가계·국가 빚은 늘고

'소득주도성장'만큼 엉뚱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세율 인상은 없었지만 과세체계를 흔들며 세금을 더 걷는 암수(暗數)였다.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와 소득세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등의 영향으로 매년 1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지속됐는데 2018년에는 2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25%와 42%로 인상한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세제개편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인상된 세금의 징수는 2019년 상반기에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금년 초과세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금 인상을 고려해 기업이 사업장 해외 이전과 투자 축소에 나서면서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초과세수로 복지를 늘리면 집권세력 지지율이 당장은 상승하겠지만 세금이 몰아낸 일자리 때문에 청년 구직자 일생은 망가진다. 첫 직장 잡기가 늦어지면 생애 소득구조가 뒤틀리고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저출산으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 투자 및 고용 관련 세금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 임금소득이 확보되면 국가의 복지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부채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줄이고 회사채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가계와 국가의 빚은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3. 대한민국 재무상태 '의견 거절' 위험 없나

한국경제 다산칼럼 2020년 4월 5일자
「대한민국 재무상태 '의견 거절' 위험 없나」

	자산		부채및자본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예치금	29	22	화폐발행	126 2167
대출금	19	2130	통화안정등 증권발행	195 415
국채	17	2958	예금및 예수금	145 2504
외화증권	375	26	비유동부채	8 7
기타의자산	32	1	자본금	- 39
비유동자산	21	3	잉여금	19 8
계	493	5140	계	493 5140

*2019년 12월 31일 기준
(달러당 원화환율 1231원50전으로 환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중앙은행 역할이 강조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했다. 원·달러 환율 급상승과 외환보유액 급감을 저지하기도 벅찬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 유동성 지원까지 맡으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한은이 Fed처럼 나설 수 없는 이유는 재무상태 차이에서 드러난다. EY한영회계법인과 KPMG로부터 각각 외부감사를 받은 한은과 Fed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화폐발행 규모는 한은이 126조원인 데 비해 Fed는 17.2배인 2167조원이다. 발권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급준비성 예금 차이도 17.2배다.

3. 대한민국 재무상태 '의견 거절' 위험 없나

외화매입 자금을 위한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164조원이지만 Fed는 외화매입 부담 자체가 없다. 자금 운용을 통한 자산 배분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Fed는 국채 매입과 기업 대출 및 회사채 매입에 99%의 자금을 집중하지만, 한은 자금의 76%인 375조원은 외환보유액에 묶여 있다. 돈을 더 찍어서 풀면 될 것 같지만 민간과 금융회사의 국내 화폐 수요는 제한적이다. 환수된 화폐는 현금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화폐 발행 부채의 감소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은 재무상태표의 현금 잔액은 항상 0(零)원이다.

한은에서 다른 형태의 부채가 증가하면 건전성 비율은 악화되고 신뢰성 저하에 따른 외화수급 불안도 심화된다. 언스트앤드영으로부터 품질 관리 및 심리를 받는 EY한영회계법인의 외부감사도 의식해야 한다. 감사 대상 기관의 계속성 유지에 중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감사의견 거절을 고려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기축통화를 보유한 Fed의 상황은 다르다.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달러 확보를 위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국가가 늘고 해외 부문의 화폐발행 수요는 증가한다. 달러를 찍어 해외로 보낼수록 Fed의 미국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능력은 확대된다. 강력한 발권력을 기반으로 Fed는 4조달러(약 500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미국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3. 대한민국 재무상태 '의견 거절' 위험 없나

Fed의 특수한 구조도 양적완화의 든든한 밑천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동전(coin)을 직접 발행해 Fed에 매각한다. Fed가 보유한 동전은 지폐와 달리 예치금 성격의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데, 2019년 말 잔액은 17억달러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연방정부가 1조달러짜리 백금동전을 발행해 Fed에 넘기고 지폐를 받아 국고에서 사용하면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이어서 납입자본이 없는 데 비해 Fed는 출범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39조원이 있고 추가 증자도 가능하다.

Fed에 비해 발권력이 극히 제한적인 한은에 지나친 양적완화 부담을 씌우는 것은 무리수다. 세수를 초과한 선심성 지출을 남발해 국가 채무를 산더미처럼 쌓으면 국가신용도는 추락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구노력을 엄정히 평가하되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산업은행 등을 통해 정부 돈을 투입할 때는 기존 주주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 부실에 따른 무상감자를 대폭 실시해야 한다. 청년이 창의력을 발휘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외환관리 책임이 막중한 한은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등 금융감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 대출 여력을 확충하는 긴급조치를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